

제13권 20호

2023. 10. 16~2023. 10. 29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부실시공 문제, 디지털 전환으로 대응하자 |
| 이슈분석 | 금융산업의 나침반, 자금순환표 |
| 금융경영브리프 | 美 대형은행들의 오월동주
서비스형 बैं킹(BaaS)의 명과 암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고금리 장기화 우려 부각되며 급등세 시현
외 환 : 끝나지 않는 긴축 우려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김종현(jh.kim_)

논단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이슈분석

선임연구위원 김완중(wjkim)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오영선(ohys)
연구위원 이성엽(josephlee)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부실시공 문제, 디지털 전환으로 대응하자
- 04 **이슈분석** 금융산업의 나침반, 자금순환표
- 08 **금융경영브리프** 美 대형은행들의 오월동주
서비스형 बैं킹(BaaS)의 명과 암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고금리 장기화 우려 부각되며 급등세 시현
외 환 : 끝나지 않는 긴축 우려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부실시공 문제, 디지털 전환으로 대응하자*

황 규 완 연구위원

얼마 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부실공사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을 천명했지만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불거진 문제인지라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설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기존 건축방식을 버리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휴먼에러를 줄이려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고령화 등으로 건설업계 역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만큼 업계의 용단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부도 처벌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의 적극적인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여전히 반복되는 부실공사 문제

몇 달 전 검단 신도시에서 유명 건설사가 시공하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불과 1년여 전 광주에서도 다른 유명 건설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해당 건설사 현장을 전수 조사하는 등 즉각적이고 강도 높게 대응했다.

우리나라의 부실공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1970년), 성수대교 붕괴사고(1994년) 등 부실공사가 원인이 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불법하도급 관행,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거론되고 있는 것까지 여전하다. 사고 때마다 정부는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들을 제시했지만 부실공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순환고리가 반복될 뿐이었다.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대 또한 크지 않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건(2023.4월)이 발생하기 불과 1년 전인 2022년 4월 정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건설사 등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시공사의 책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한 처벌 예고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에 핵심부위의 철근(전단보강근)이 누락되는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부실을 예방하지 못했다.

정부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묵은 부실시공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제도 미비는 핑계에 불과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측면에서 건설업계의 항변은 설득력에 한계

반복되는 부실공사에 대한 건설업계의 항변은 언제나 동일하다. 공사계약 단가가 낮아 수익이 적으니 품질이 저하되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규정 등을 개선한다면 부실공사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법 하도급 문제는 건설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원청업체(시공사)의 책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또한, 공사단가 문제 역시 건설업계의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제도 측면에서 공사단가를 규정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다. 현재는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그 외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공사가격 외에 건설사의 전문성, 역량, 사회적 책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현 낙찰제도는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개선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 등이 건설업계의 요구를 고려해 개선된 제도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공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항변이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체 공사수주의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건설 계약은 당사자의 자율적 계약에 기반해 공사 단가가 결정되므로 저가 수주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건설사에 있다. 건설사가 받아들인 가격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등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은 수시로 언론 등에 회자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발주회사(시행사)가 저가공사 및 공기준수(책임준공)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하지만 지나친 주택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낮은 R&D 투자로 인한 시공역량의 하향평준화 등 건설업계 스스로가 불리한 계약을 종용받는 원인을 제공한 점도 있다.

⊞ 디지털 전환 등의 자구노력으로 신뢰 회복해야


건설업계의 지속적인 자구노력은 신뢰 회복의 첫 걸음

건설업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업역이라는 점에서 신뢰와 직결된다. 반복되는 부실공사로 건설업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고 정치권 등은 각종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식상한 표현이지만 건설업계가 자초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계의 자구노력이다. 신뢰를 잃은 뒤에 제값 주고 공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항변한들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업계 내에서는 통합사업관리 등을 도입해 기존 건설 관행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일부 업체들의 안일한 판단이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제도 역시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기존의 건축공법(주로 RC공법)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휴먼에러 감소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RC(Reinforced Concrete)공법은 매우 유용하지만 인력 소요가 많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디지털 전환에 한계가 있다. 결국 모듈러 건축으로 대표되는 OSC(Off-Site Construction) 도입이 불가피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R&D 투자가 필수적이다.

건설업의 OSC도입 및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다른 의미로 필수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직자와 기업 간의 눈높이 차이 등으로 RC공법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충분치 못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 허나 이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 노동자 파견 국가와의 협상 등으로 건설업의 요청을 들어줄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OSC 및 디지털 전환은 RC공법의 한계를 타개할 유력한 대안이다. 또한 건설-부동산업이 금융업과 밀접해지면서 투자자의 신뢰확보 및 건축물의 가치 유지를 위해서도 전환 압력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도 처벌에만 치우친 부실시공 대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OSC 도입 및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보다 더욱 과감한 유인책을 제시해 건설업체들이 기존 관행을 벗어날 수 있는 메리트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처벌만으로 부실시공이 예방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간의 역사로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 보다는 기업의 본질이 이윤추구라는 점을 활용해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로운 공법 및 디지털 전환이 빠른 시일 내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업계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건설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반복되는 부실공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SC 및 디지털 전환 등 휴먼에러 최소화를 위한 과감한 R&D 투자도 필수적

정부도 처벌보다는 건설업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를 유도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금융산업의 나침반, 자금순환표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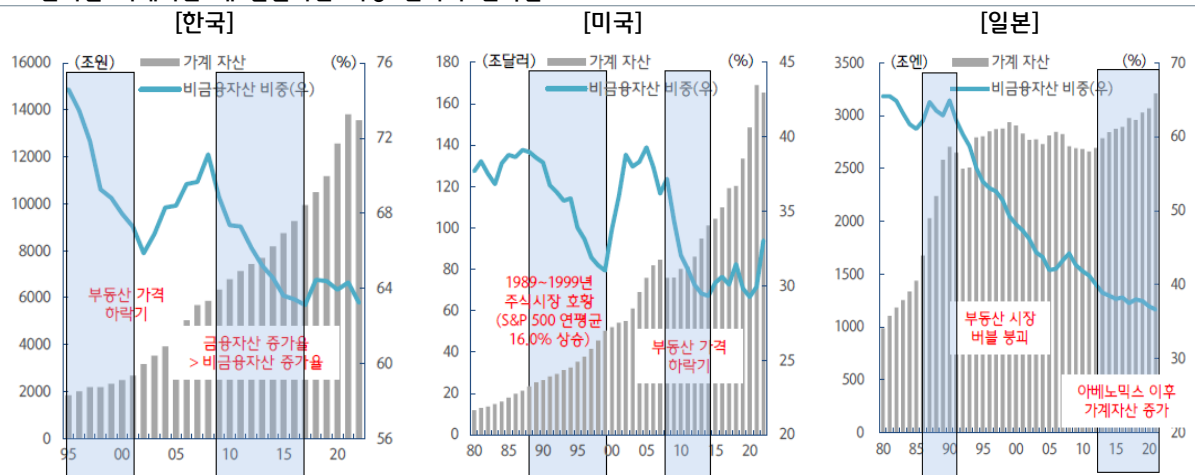
김 완 중 선임연구위원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과 초저금리 환경은 경제주체들의 금융행태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실물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금융거래와 결과를 응축하고 있는 자금순환표를 통해 구조변화를 점검하고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과 자산구성 변화,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역할 변화, 대출 수요 감소 및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금융권 대응 등 향후 직면할 구조적 문제들에 시사점을 모색한다.

■ 자금순환표로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을 점검

- 자금순환표는 일국 내 경제주체들의 금융활동 간의 상호 관계 뿐만 아니라, 발생한 소득과 차입금, 해외자금의 유출입 구성 내역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한 표
- 각 부문별 장기 시계열을 활용해 경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경제 주체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전망에도 활용 가능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산업내 구조 변화 및 자금운용 행태 변화뿐만 아니라 특정 제도 도입이 금융부문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어
- 특히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의 금융부문의 자산/부채 포트폴리오 변화와 팬데믹 전후 구조변화 등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
 -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도, 직간접 금융시장의 성숙 정도에 따라 상이한 해석 가능

■ 한미일 가계자산 내 실물자산 비중 변화와 변곡점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FRB

자료 : BOJ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10.25일 발간 예정인 '2023.3Q 시중자금흐름 동향 점검 및 시사점'을 참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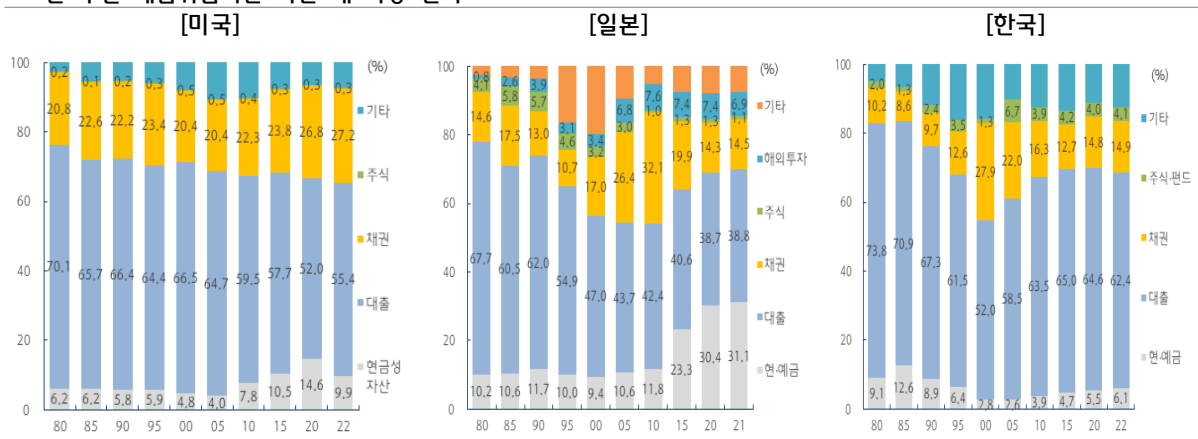
■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국 예금취급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는 부동산 시장 조정과 가계부채 디레버징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국내 현실에 시사점 제공

-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비금융법인의 회사채 위주의 자금조달 확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가계부채 조정으로 자산내 대출 비중이 추세적으로 감소
 -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00년 64%에서 '22년 82%로 확대된 반면 대출수요 감소로 자산운용내 대출 비중은 '00년 67%에서 '20년에는 52%까지 축소
- 간접금융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예금취급기관은 장기간의 주택시장 조정이 진행되며 자산내 대출비중이 고점 대비 약 30%p 축소
 - 주택시장 급등기 68%에 달했던 대출 비중은 '21년에는 39% 수준까지 하락
 - 대출 비중 축소에 따른 여유 자산은 채권투자로 활용(10.7% → 32.1%)되었으나 BoJ의 YCC 정책과 무제한 채권매입 이후 채권 비중 급감한 반면 현예금 비중 급증
- 한편 국내는 외환위기 이후 소매금융 활성화와 주택시장 장기 상승과 맞물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대출비중이 52%에서 한 때 65%까지 상승
 - '21년 이후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조정 압력 부각 등으로 대출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금년 들어 중기대출 급증과 규제 완화,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재확대 예상

■ 취약한 민간신용 구조 고려시 급격한 조정보다는 연착륙 유도를 위한 노력이 절실

- 주택시장 연착륙 및 가계부채 디레버징 유도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팬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는 기업대출 관리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
 -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된 반면 기업부채가 급증하며 GDP 대비 민간부채 비중은 '22년 말 281.7%에 달해 OECD 국가 중 2위, 증가속도는 세계 1위
-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 중심의 금융 지원책으로 기업부문의 부채가 급증한데다 부동산금융 관련 기업대출 급증이라는 점에서 부실 위험 경계

■ 한·미·일 예금취급기관 자산 내 비중 변화



자료 : FRB

자료 : BOJ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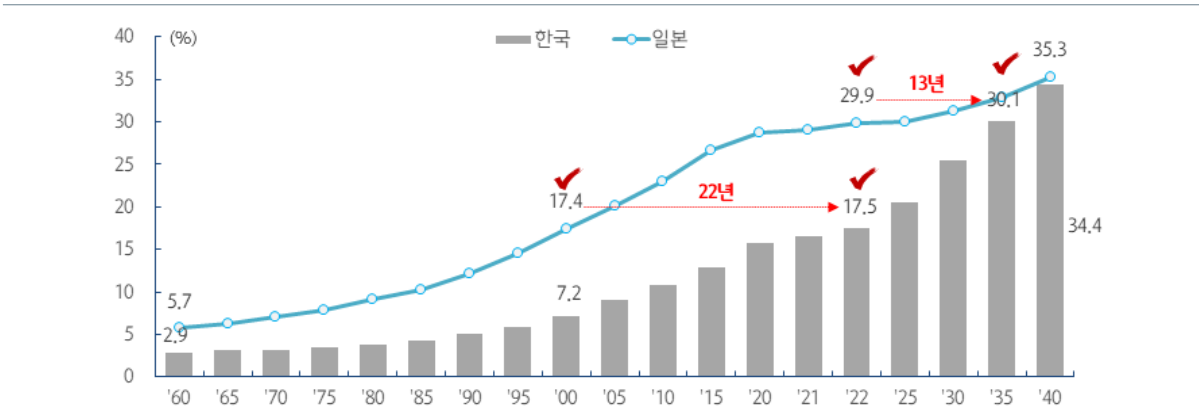
■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가계자산 구조 변화와 관련해 일본 경험을 주목할 필요

- 고령화 진전에 따른 가계 자산운용의 보수화와 포트폴리오 변화가 금융업의 구조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美·日의 자금순환표는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
 -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가계자산의 급격한 조정이 금융산업의 구조 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
-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2년에 17.5%에 도달한 반면 일본은 이미 '00년에 17.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여 년간 일본 가계의 금융행태 변화는 향후 국내 금융산업에 큰 시사점을 제공
 - 특히 일본의 고령화 속도가 '20년대 들어 둔화되기 시작해 한국이 일본의 현 수준 (30% 내외) 도달까지 13년에 불과해 향후 금융산업내 급속한 변화가 예상
- 고령인구 증가 및 고금리 고착화시 주식·펀드 등 적극적인 자산운용보다는 현·예금과 보험·연금 등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며 금융시장 내 동 산업의 성장을 견인
 - 주식시장 호황으로 가계자산 내 주식·펀드 비중이 한 때 25%에 육박했으나 버블 붕괴 및 고령화 진행에 따른 보수적인 자산운용 확대로 '10년대에는 10%를 하회
 - 한편 노후 대비 보험·연금자산 비중은 90년대 후반 이후 30%대 초반에서 고착화

■ 연금시장이 고도화된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을 활용한 노후 대비책을 강구

-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도 가계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은 최대 36%에 머물렀으나 주식·펀드를 포함한 자본시장 노출 정도는 70%에 육박
 - 미국의 경우 보험·연금상품의 상당 부분이 채권투자 및 뮤추얼 펀드로 운용되고 투자운용 수익률에 기반해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DC형 상품 중심
- 반면 현·예금 비중은 30년간 15%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한국('22년 46%)과 일본 ('21년 54%) 가계의 고령화 대비 포트폴리오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

■ 한·일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자료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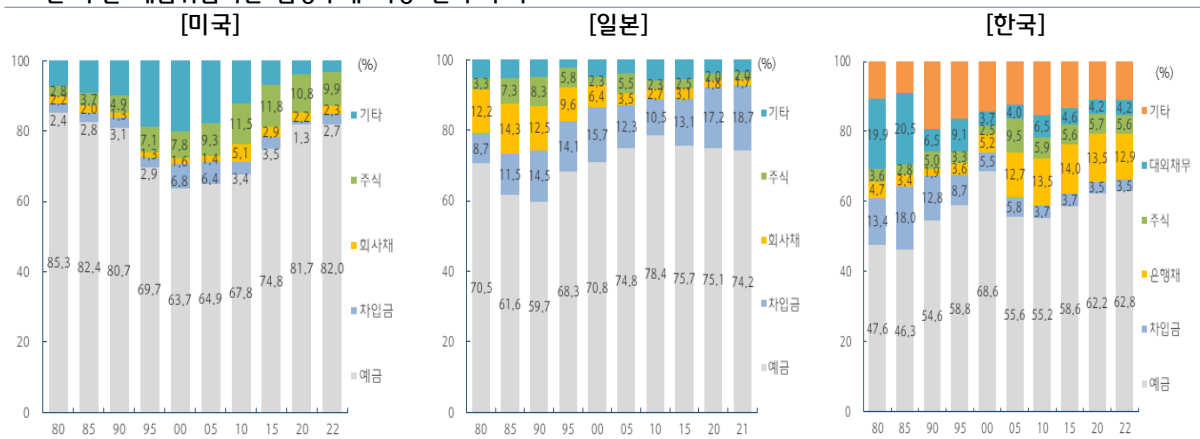
■ 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가 은행의 B/S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 필요

- 미국은 금융위기 이전 금리하락과 시장성수신 증가로 예금을 통한 조달이 감소했고 위기 이후 연준의 양적완화로 채권투자가 급감하는 등 B/S 구성이 급변
 - '99년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후 상업은행들의 투자은행 업무 겸업으로 시장성 수신이 증가하며 급성장했으나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귀결
- 일본은 제로금리 정책 장기화로 정기예금 잔고가 '99년에 정점 기록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대출수요 축소로 B/S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80%에 육박
 -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은행의 무제한 채권매입은 은행의 채권투자 급감을 초래
- 국내는 민간신용 급증 과정에서 예금조달 비중은 60%대 초반에 그친 반면 은행채 비중 급증, 향후 대출수요 감소시 시장성 수신 중심의 포트폴리오 변화 불가피
 - 美·日 예금취급기관의 은행채 조달 비중은 2~3% 수준인 반면 한국은 13% 수준

■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행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시 데이터 분석을 병용해 보완할 필요

- '22년 중반 이후 글로벌 차원의 물가급등에 대응한 중앙은행들의 통화긴축 강화로 금리가 급등하며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및 운용 행태 변화 급변
 - 고금리 본격화로 저원가성 예금의 정기예금 전환이 확대되며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한데다 채권을 비롯한 보유 자산의 손실이 급증하며 금융기관들의 부실 위험 증대
- 자금순환표가 중장기 구조 변화에 시사점을 제공하지만 금융환경 급변과 미시 구조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해 미시 데이터를 병용해 보완할 필요
 - 일례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위해서는 소득·자산·연령대 별 분석과 더불어 자영업자 부채 및 양극화 관련 지표 등 미시 데이터를 접목해 대응책 마련을 강구할 필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 금융부문의 구조 변화가 발생했듯이 3년의 팬데믹 과정이 초래할 구조변화에 대한 점검과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 한·미·일 예금취급기관 금융부채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FRB

자료 : BOJ

자료 : 한국은행

美 대형은행들의 오월동주

오영선 연구위원

JP Morgan,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이 디지털 결제시장에서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으로 'Paze'라는 모바일 지갑을 선보일 예정이다. Paze가 은행 계좌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기존에 빠르게 결제시장 점유율을 높인 애플페이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다양한 핀테크 회사들과 활발하게 파트너십을 형성해왔던 금융회사들은 경쟁기업과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협업 확대를 통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

■ 경쟁관계에 있던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공동으로 모바일 지갑을 출시할 계획^[1]

- JP Morgan, Bank of America, Wells Fargo 등이 내년부터 모바일 지갑인 'Paze'를 기반으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연계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Paze는 결제 앱 Zelle를 운영해온 은행 컨소시엄 Early Warning Services에서 관리하게 되며 은행들은 Zelle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공이 재현되기를 기대
 - Zelle는 수표로 대금 처리를 해왔던 기업에게 즉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증가^[2], '22년 기준 거래액이 약 6천억 달러로, 최대 규모 P2P앱으로 성장

■ Paze는 빅테크에 맞서기 위한 것이며 특히 애플페이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

- 탭투페이(tap-to-pay) 방식의 애플페이 사용자가 단기간 급증하자 소매 결제시장에서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던 은행들의 위기의식 고조
 - 애플페이 사용자는 현재 5억명 이상이며 글로벌 결제시장의 6%를 차지
- 구글과 삼성 역시 지급 결제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X(舊 트위터)도 결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경쟁이 격화^[3]
- Paze는 은행들이 이미 보유한 대규모 손님을 기반으로 초기부터 1억 5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은행 계좌에 직접 연결하여 애플페이와 차별화 가능

[1] "Rival banks unite to take on Big Tech", FT, 2023.9.18


[2] "Despite A Late Start, Bank-Owned Zelle Moves More Money Than Venmo And Cash App Combined", Forbes, 2022.9.8

[3] "Elon Musk pushes forward with Twitter payments vision", FT, 2023.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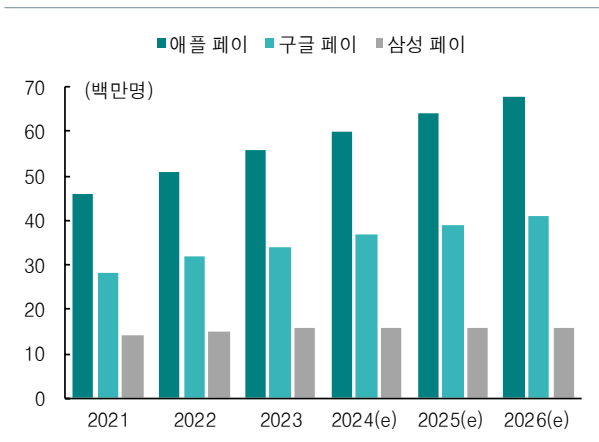
■ 국내 금융회사들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사와 협력관계를 구축

- NH투자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은 최근 토큰증권 시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보유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증권사 컨소시엄을 구성
- 또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지난해 용인에 공동점포를 개설했고,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대전에 함께 점포를 오픈하는 등 영업점을 공유
 - 점포 축소로 인해 손님이 불편을 겪는 지역에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
- 아울러, 하나, KB, 우리 등 8개의 은행들은 우체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소비자들도 우체국에서도 은행 계좌로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
 - 산업은행도 하나은행과 점포 이용 편리성을 위한 제휴를 추진, 산업은행 이용 손님은 하나은행에서도 간단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금융회사들은 경쟁회사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협업을 확대하면서 공진화 가능

- 그동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고도화 등의 이유로 핀테크 회사들과 적극적인 제휴를 추진해왔던 금융회사들은 경쟁기업과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음
- 인재 육성, 중소기업 지원, 금융소비자 효익 증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기후 변화 대응 등 협업 가능한 업무는 다양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성과도 기대
- 특히, 대형 금융회사들이 동종업간 파트너십에 의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조직 문화를 기반으로 협업체제 구축이 용이
 - 빠른 속도로 기술 변화를 주도하는 핀테크와 달리 전통적 금융회사는 규제 준수와 수익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내재해, 업무추진 방식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높음 

■ 미국 모바일지갑 서비스 이용자 추이



자료 : Financial Times

■ 국내 금융회사의 동종업간 협업 사례

금융회사	협업 내용
하나은행, 우리은행	공동 점포 운영 및 공동 자동화점(ATM)운영
8개 은행(하나, IBK 등),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처리, 수수료 없이 ATM 이용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스웨덴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참여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토큰증권 공동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업계 표준 정립 등

자료 : 언론 보도

[4] "Four Reasons Why Goldman Sachs and Apple Are Breaking Up", Finovate, 2023.8.2

서비스형 बैं킹(BaaS)의 명과 암

이성엽 연구위원

서비스형 बैं킹(BaaS)은 저성장과 유동성 압박에 직면한 은행에게 새로운 서비스 영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25개 은행이 BaaS를 도입했고, 실제로 많은 은행들은 BaaS 도입을 통해 손님 접점을 강화하고 사업 다각화에도 성공했다. 그러나 이것이 BaaS의 모든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BaaS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자칫 은행 본연의 비즈니스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BaaS를 하나의 채널로 활용하되 지나친 의존을 피해야 하는 이유다.

■ 서비스형 बैं킹(BaaS), 손님 기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거나 다양한 리스크도 존재^[1]

- 금융서비스 기관인 S&P Global에 따르면, 서비스형 बैं킹(이하 BaaS^[2])은 은행의 손님 기반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수익성과 규제 대응 등의 리스크가 존재
 - BaaS는 전 세계적으로 125개 은행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2026년까지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익을 창출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기회의 영역^[3]
 - 다만, Baa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규제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은행의 단기 수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사업의 지속성과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 도입의 필요성 : 강력한 파트너십 기반의 손님 기반 강화 및 사업 다각화에 효과적

- BaaS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술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손님 접점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하는데 강력한 채널로서 높은 활용가치를 보유
 - (손님 기반 강화) BaaS를 제공하는 미국 지역 은행들의 2023년 2분기 예금 증가율은 2.2% 증가한 반면, 자산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BaaS 미제공 은행들은 0.8% 감소
 - (수수료 수입 확대) 제휴사의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해 결제 및 투자 예치금 관리 등 비이자수익을 창출하는데 용이하며, 미국 Coastal Financial Corp.의 경우 BaaS를 통해 창출되는 비이자수익이 전체 순이익의 49%를 차지
 - (사업 다각화) BaaS 도입 은행은 파트너사와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모색하는데, 미국 내 BaaS 도입 은행의 여신 손님은 65%가 소비자 및 기타로 분류된 반면, 지역 은행은 전체 여신의 68%를 상업용 부동산이 차지

[1] "Banking as a service still boosts banks deposits but has its risks", S&P Global, 2023.09.21

[2] 서비스형 बैं킹(BaaS):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가 제3자와 함께 제휴 기반의 특화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

[3] "What's Going On In Banking 2023", Cornerstone Advisors,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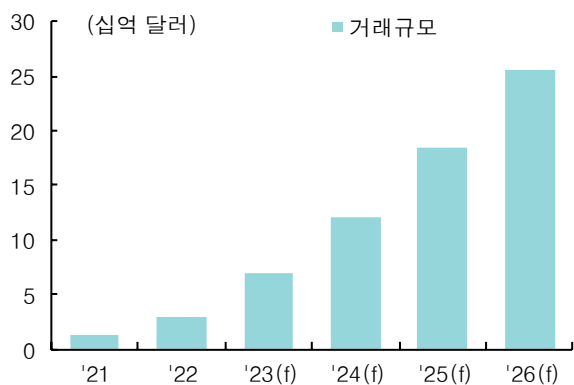
■ 잠재 리스크 : 단기 수익성 약화 및 사업 지속성과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부정적

- 추진력 있는 BaaS 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구축 및 규제 대응 비용이 수반되며, 파트너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사업 지속성에 리스크로 작용
 - (수익성 리스크) BaaS 구현을 위한 API 개발 및 빅테크 수준의 UI/UX 구축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대형은행(Goldman Sachs)부터 소형은행(Lewis & Clark Bancorp)까지 단기간 수익창출에 실패
 - (규제 리스크) 은행과 BaaS 파트너 간의 관계에는 공동으로 충족해야 하는 법률 및 규정 준수 의무가 존재하는데, 미국 Blue Ridge Bank의 경우 최근 1년간 BaaS 규제 대응 비용으로만 1,100만 달러를 지출
 - (파트너십 리스크) 파트너사가 1) 자체 은행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2) 독점적 파트너십 관계를 파기할 경우 은행은 손님 및 대규모 금융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 Forbes는 은행의 BaaS 도입 확산이 자칫 은행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 (Forbes, 2023.05.06)
 - BaaS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서비스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은행이 아닌 핀테크에 대한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

■ BaaS를 하나의 은행 채널로 활용하되, 지나친 의존은 지양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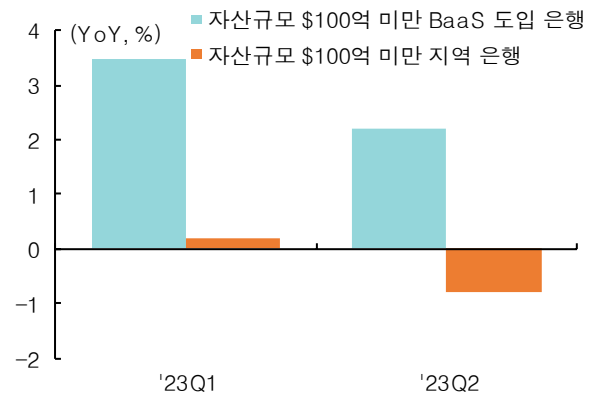
- 국내 은행은 전통적인 영업의 범주를 뛰어넘어 손님이 필요로 하는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aaS 생태계 구축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할 필요
- 다만, BaaS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은행 본연의 비즈니스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높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빅/핀테크의 손님기반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
 -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개발 경쟁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술 인프라(개발+인력)를 보유함으로써 빅/핀테크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 📌

■ 글로벌 BaaS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Cornerstone Advisors

■ 美 BaaS 도입 은행과 미도입 지역 은행의 예금 증감률 비교



자료 : S&P Global

금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부각되며 급등세 시현

윤 석 진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매파적 9월 FOMC와 견조한 美 고용 지표 등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상승 흐름에 동조화되는 가운데 韓 소비자물가 반등 및 경제지표 호조에 의해 상승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대됨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유의가 필요하다. 美 추가 인상 필요성 낮아지며 10월 금통위의 금리 동결 전망되나,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당분간 금리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 글로벌 금리는 매파적 9월 FOMC와 美 고용 서프라이즈 등으로 장기물 중심 급등세

- 9월 FOMC에서 연준은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나, 점도표의 향후 금리 경로 및 美 GDP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고금리 장기화 의지를 피력
 - 점도표 중간값 변화(6월 → 9월, %) : (2024년) 4.6 → 5.1 / (2025년) 3.4 → 3.9
 - 美 GDP성장률 전망치(6월 → 9월, %) : (2023년) 1.0 → 2.1 / (2024년) 1.1 → 1.5
- 아울러 파월 의장의 美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 인정 발언과 美 구인공고 및 비농업 고용자수의 예상치 상회 영향 등이 더해지며 미국채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
 - 美 비농업고용 증감(만명) : 7월 15.7 → 8월 22.7 → 9월 33.6 (예상 17.0)
- 9월 美 CPI 또한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미국채 30년물 입찰 부진에 따른 장기채 수급여건 악화 우려 재부각으로 장기물 중심의 금리 급등세를 시현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9.8일 4.98/4.27 → 22일 5.10/4.44 → 10.12일 5.07/4.70


■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상승세 동조화 속 韓 소비자물가 반등 및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 국내 8월 산업생산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힘입어 광공업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 또한 증가 흐름을 이어가면서 견조한 회복세를 기록
 - 韓 산업생산(% MoM) : 5월 0.7 → 6월 0.0 → 7월 -0.8 → 8월 2.2
- 한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업 물가의 전월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 상승 및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 기저효과 약화 등으로 상승 폭을 확대
 - 韓 CPI/근원CPI (% YoY) : 23.7월 2.3/3.3 → 8월 3.4/3.3 → 9월 3.7/3.3
- 국내금리는 미국채 약세 동조화 속 국내 물가 우려 및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
 - 국고 3/10년 금리(%) : 9.8일 3.80/3.90 → 22일 3.88/4.00 → 10.13일 오전 3.98/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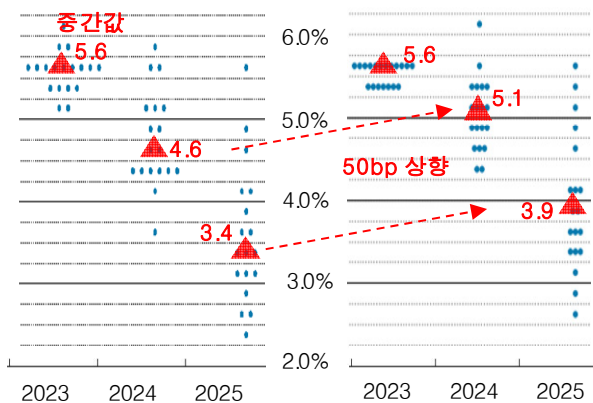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통화정책 변수로 작용할 소지

-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대규모 이스라엘 기습이 감행(10.7일)되고 이후 이스라엘의 전쟁 선포(10.8일)와 반격이 이어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 공격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책이 거론되고 있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사우디 화해(미국 주도의 관계 정상화 추진) 견제라는 시각 또한 제기
 - 수니파 주도의 중동질서 변화에 반발한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했다는 주장도 대두
- 중동지역 무력충돌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지표 변동은 제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국제적 제재 강화 등 불확실성 상존
 - 금년 들어 이란의 원유생산 증가로 유가 상승압력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란으로의 리스크 확산은 원유 수급여건을 악화시켜 유가 변동성 확대 소지
- 단기적으로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금리 하락 요인이 우세하나, 향후 유가 환율 변동성 확대 및 물가 압력 자극 시 국제 통화정책 여건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 10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되나,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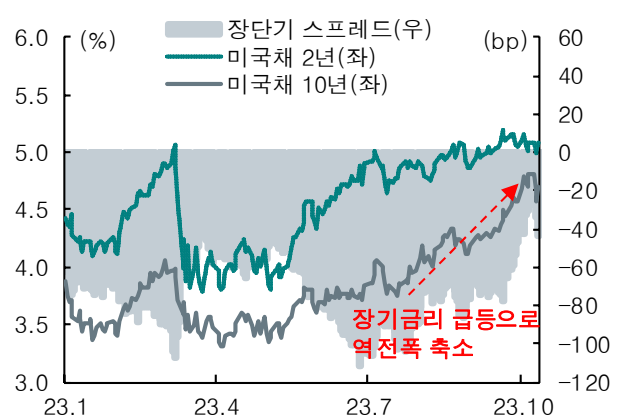
- 최근 美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연준 내에서 추가 인상 없이도 긴축 수준이 강화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 증대
 - 9월 FOMC의사록에서도 추가 인상 신중론이 언급되는 등 매파적 색채 다소 완화
- 이에 따라 10월 금통위의 금리 인상 부담 또한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잔존한 물가 위험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필요성을 감안해 기준금리 동결 결정 예상
- 국내외 추가 인상 우려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압력은 완화되었으나, 美 장기채의 수급 여건 악화 국면과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의해 당분간 금리 변동성 확대될 소지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85%~4.10%, 4.00~4.25% 범위로 전망 

■ 연준 23.6월(좌) 및 23.9월(우) 점도표 비교



자료 : FRB

■ 장기물 중심의 美 국채금리 급등세



자료 : Bloomberg

외환: 끝나지 않는 긴축 우려

오 현 희 연구위원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큰 폭 상승하며 연고점을 갱신(10.4일 1,363.5원)하였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美 경제지표의 예상치 하회와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적 발언들로 긴축기조 완화 기대가 높아지며 1,330원대까지 반락하였다. 다만, 9월 美 CPI 발표 이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동성이 이어지는 장세가 나타났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과 물가지표 등을 감안할 때 긴축 우려는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상회하는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미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화 약세에 힘입어 하락한 후 재차 반등

- 추석 연휴 이후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1,36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美 국채금리 하락과 긴축기조 완화 기대 등으로 1,330원대까지 반락
- 그러나 이후 발표된 美 9월 CPI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달러화가 강세 전환되고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로 상승하며 낙폭 축소
-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에도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이-팔 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준인사들의 완화적 스탠스와 美 국채금리 급등세 진정 등으로 달러화 약세 전환


■ [국제 환율] 긴축 경계감 완화로 약세흐름을 보이던 달러화는 CPI 서프라이즈에 반등

- 달러화는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와 연준 의사록 공개 이후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축소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9월 물가지표 발표 이후 낙폭을 축소
 - 달러화 지수는 美 국채금리 하락과 긴축우려 완화 등으로 연고점(107.3)에서 105.7까지 하락(10.12일)하였으나, 9월 CPI 발표 이후 106.6을 상회
- 유로화는 달러 약세 및 중동 분쟁 영향 제한 등으로 강세를 보였으나, ECB 9월 의사록에서 금리인상 종료 가능성이 확인되고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면서 약세
- 엔화는 日 당국의 대응과 중동 무력충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 강세요인과 BOJ의 물가 전망 상향 조정, 외환당국 엔화 약세 용인 발언 등 약세 요인 혼재
- 위안화는 중국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및 재정지출 확대 검토 발표 등으로 국경절 연휴 이후 반등하였으나, 미 CPI 발표 이후 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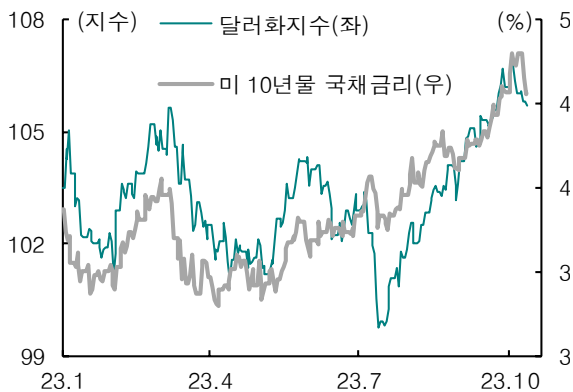
■ 미국의 견조한 고용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되며 긴축 우려 재개

-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기대만큼 둔화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임을 시사
 - 美 9월 4주차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20.7만건) 예상치 하회, 9월 美 비농업 신규고용자 수(33.6만명) 예상치 상회, 8월 구인건수 반등(961만건, 전월대비 7.7% 증가)
- 아울러 9월 美 헤드라인 CPI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고, 여전히 높은 주거비와 에너지가격 등으로 물가하락 속도 지연 우려가 높아지는 등 물가 경계감 재확산
 - 9월 헤드라인 CPI는 3.7% 상승하며 예상치(3.6%)를 상회하였으며, 휘발유(2.1%), 운송서비스(0.7%), 주거비(0.6) 등이 큰 폭 상승
- 연준은 과열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하며 고용지표를 주시해 온 만큼 최근 발표된 지표들로 긴축 우려가 강화
 - IMF의 최근 분석에서도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과열이 물가상승의 가장 큰 동인이었다고 분석(노동시장 과열의 근원물가 기여율(%): 미국 178.0, 유로존 11.2, 영국 12.6)

■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속 미국의 견조한 고용과 물가압력 등으로 달러화 강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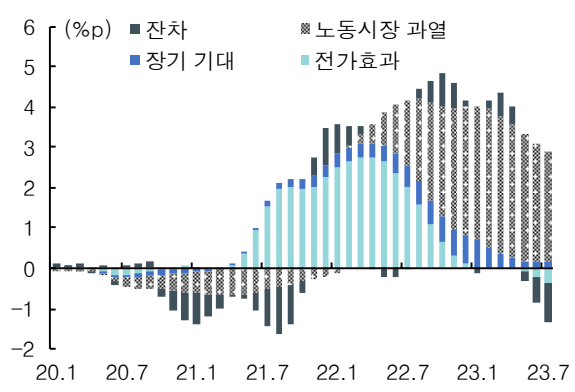
-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고용시장이 견고한 상황을 지속함에 따라 연준의 긴축 우려가 계속되며 국제금리 상승과 달러강세가 이어질 가능성
 -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 윌러 연준 이사 등 연준인사들은 美 국채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내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 금리 인상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
- 아울러 중동지역 분쟁 발생 유가상승 불안 등도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향후 2주간 1,300~1,360원에서 등락 예상 

■ 달러화 지수와 美 10년물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 미국 근원물가 변동요인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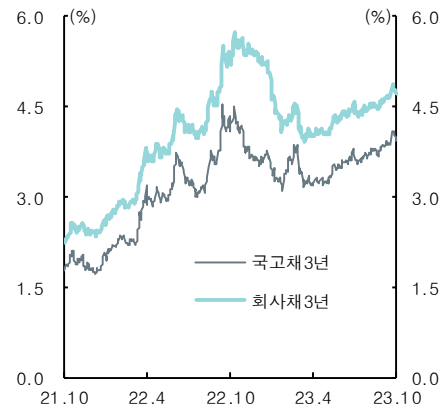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3.10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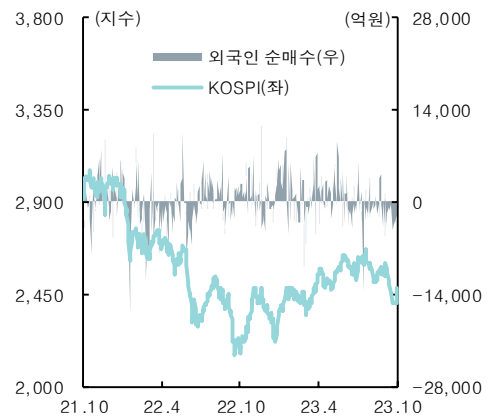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9월말	3.83	3.83	4.01	4.66	3.88	3.94
10월 6일	3.50	3.82	4.05	4.80	4.02	4.11
10월 9일	-	-	-	-	-	-
10월 10일	3.47	3.82	4.05	4.78	4.00	4.09
10월 11일	3.47	3.82	4.04	4.74	3.95	4.04
10월 12일	3.51	3.82	4.02	4.72	3.93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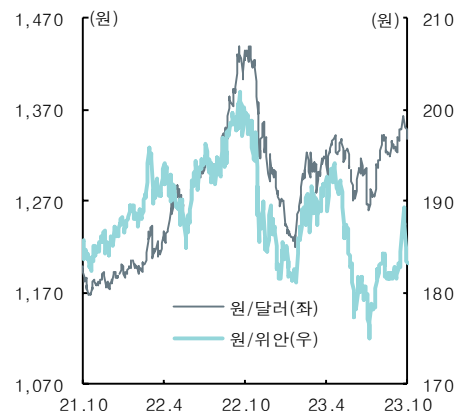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9월말	2,465.1	67,613	366	-282
10월 6일	2,408.7	65,228	289	-3,263
10월 9일	-	-	-	-
10월 10일	2,402.6	95,059	416	-2,078
10월 11일	2,450.1	91,408	447	-1,196
10월 12일	2,479.8	89,291	515	-580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9월말	1,349.3	901.7	184.6	1,416.9
10월 6일	1,349.9	904.0	187.6	1,429.1
10월 9일	-	-	-	-
10월 10일	1,349.5	907.4	185.0	1,431.1
10월 11일	1,338.7	897.4	183.4	1,421.6
10월 12일	1,338.5	893.4	183.3	1,4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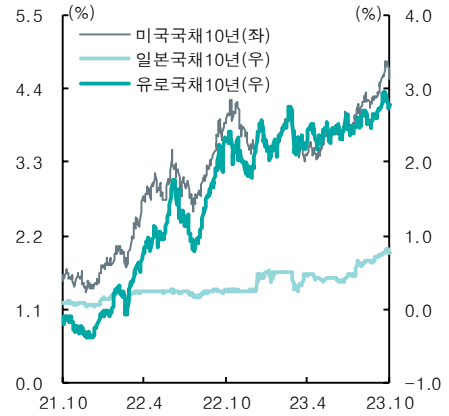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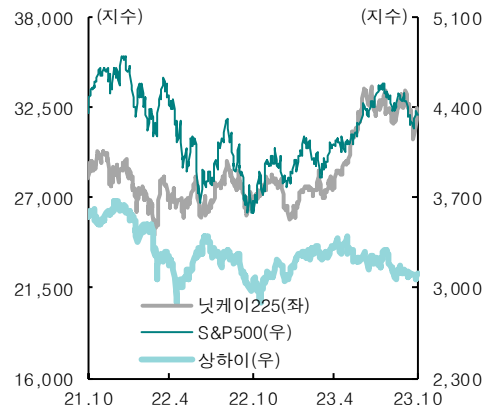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9월말	5.33	5.40	5.04	4.57	0.77	2.84
10월 6일	5.33	5.41	5.08	4.80	0.81	2.88
10월 9일	-	-	5.08	4.80	0.81	2.77
10월 10일	5.33	5.43	4.97	4.65	0.78	2.78
10월 11일	5.33	5.39	4.98	4.56	0.77	2.72
10월 12일	-	5.39	5.07	4.70	0.76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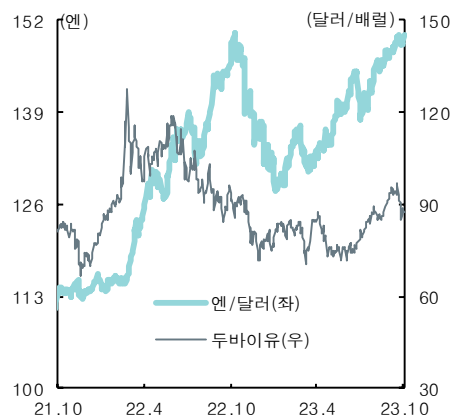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9월말	4,288.1	31,857.6	-	4,174.7
10월 6일	4,308.5	30,994.7	-	4,144.4
10월 9일	4,335.7	-	3,096.9	4,112.6
10월 10일	4,358.2	31,746.5	3,075.2	4,205.2
10월 11일	4,377.0	31,936.5	3,079.0	4,200.8
10월 12일	4,349.6	32,494.7	3,107.9	4,198.2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9월말	149.31	1.057	96.1	1866.1
10월 6일	149.29	1.059	84.8	1,845.2
10월 9일	148.50	1.057	87.1	1,864.3
10월 10일	148.71	1.060	88.5	1,875.3
10월 11일	149.15	1.062	88.2	1,887.3
10월 12일	149.78	1.053	87.3	1,883.0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2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3년 10월 13일 인쇄

2023년 10월 16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3권 2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